

의안번호	제256호
------	-------

발 의 연 월 일

2024. 3. 4.

##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김 태 금 의원 외 2명

#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김태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256 호
----------	---------

발의연월일 : 2024년 3월 4일

발의자 : 김태금, 김영진,  
이정순 의원 (3인)

## 1. 제안이유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 사업자, 주민의 책무(안 제3조~제5조)
- 다. 안전관리 대상 석면건축물(안 제6조)
- 라. 석면조사 및 조사결과 공개(안 제7조~제8조)
- 마. 석면주민감시단(안 제9조)
- 카. 처리비용 지원(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1】
  -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 제8조, 제21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32조, 제33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28조, 제3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다. 기 타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 2024. 3. 5. ~ 3. 11. [7일간]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2】

4) 성별영향평가 : 【붙임 3】

##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군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주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예산군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군수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 대상)**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석면조사) ① 영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조사기관으로 부터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예산군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결과 공개)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예산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석면주민감시단) ① 군수는 석면철거·해체작업을 할 경우, 필요 시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 중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주민으로 석면주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주민감시단 운영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석면해체·제거 공사장으로 한다.

1. 도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③ 석면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감시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

2. 석면 비산 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 여부

3.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 여부

4.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석면주민감시단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처리비용 지원)** ① 군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석면의 해체·제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관 계 법 령

□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890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서 석면등의 사용등을 금지하거나 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석면등에 대한 사용등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등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 등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인 경우(같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2.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통보한 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 등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인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업의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 가능하게 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관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건축물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석면조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④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 12. 30., 타법개정]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2조(석면건축물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

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다만, 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09호, 2022. 12. 9., 일부개정]

**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④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첨부파일의 용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의 열람 장소 및 기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5. 그 밖에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작업기간 동안 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9646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3.~9. (생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붙임 2】

###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주요내용)

- 안 제7조(석면조사), 안 제10조(처리비용 지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예상됨.

#### 4. 작성자 : 김태금 의원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충남예산010			
정 책 명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부서명	의회사무과		
	담당자명	김정환	전화번호	041-339-707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2월 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과)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한 사항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가족지원과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용미/041-339-7912)				
의회사무과장 귀하				